

새 천년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의약분업이 시작된다

1. 의약분업이란 무엇인가 ?

의약분업은 의사가 진단하여 처방전을 발행하면, 약사가 처방전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조제·투약하는 의약 제도이다.

2. 의약분업은 왜 필요한가 ?

우리 나라 의약품

오·남용은 심각한 수준이다.

항생제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약을 써도 균이 죽지 않는 항생제 내성률이 선진국의 5~7배에 이르고 있다.

약제비 부담 역시 적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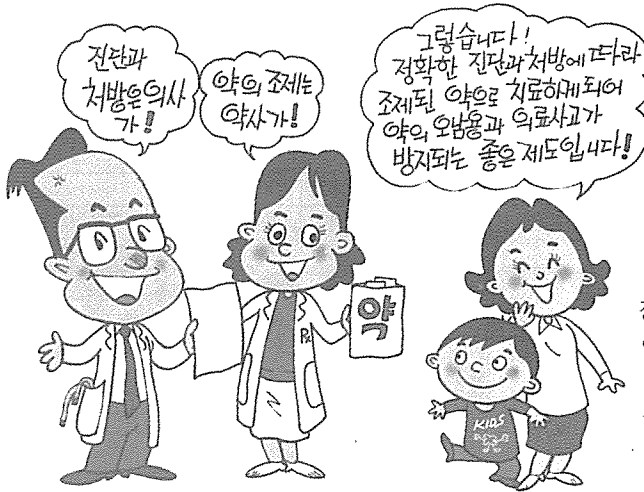
약을 많이 쓰다 보니 국민들의 약값 부담이 커 전체 의료비 중 약값으로 지출하는 비율이 30%나 되어 미국 8.4%, 영국 15.3% 등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다.

3. 의약분업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필요한 약을 필요한 만큼만 안전하게 조제, 투약받게 되므로 불필요한 약물을 복용하는 일이 없게 된다.

보다 저렴하게,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다.

병원에서 약 받고, 약국에서 약



병·의원에 한꺼번에 지불하던 진료비와 약값을 병·의원과 약국에 나누어 내면 된다.

단골 약국 제도란 ?

단골 약국 제도란 직장이나 집 근처에 편리한 약국을 정해 놓고 이용하는 제도이다. 한곳의 약국을 주로 이용하게 되면 내가 먹는 약에 대한 모든 기록들이 보관된다.

받고……. 주는 대로 받다 보니 약값도 만만치 않고……. 이러한 현실을 바로 잡을 것이다. 이제 꼭 필요한 약만을, 꼭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게 된다.

4. 의약분업으로 인한 국민 생활에 번거로운 점은 없는가 ?

익숙해지기까지 불편은 잠시… 하지만 평생 지켜야 할 건강부터 생각합시다.

처방전 없이 마음대로 약도 못 사나요? 약 하나 먹으러 병원 따로, 약국 따로… 의료비가 더 들지 않겠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들을 한다. 하지만 아픈 원인을 정확히 찾아 초기에 진단받고 필요한 약을, 처방받아 약을 조제·투약 받으면 가장 빠르고 가장 경제적인 건강 생활의 방법이 된다.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지금까지

이렇게 되면 약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등의 약물 부작용과 똑같은 약을 이중으로 먹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게 된다.

또한 처방전을 미리 원하는 약국으로 FAX 등을 통해 보내면 기다리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5. 의약분업에 예외도 있을까 ?

항생제 등 전문 의약품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통해 약국에서 조제, 판매되지만 소화제, 종합 감기약 같은 일반 의약품은 지금까지처럼 약국에서 살 수 있다.

또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애인, 응급 환자 등은 예외로 했다. 특히 의료기관과 약국이 없는 도서·벽지 지역에서도 예외가 인정된다.

꼭 필요한 주사제는 병·의원에서 직접 맞을 수 있다.

매우 심각한 주사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 주사제가 분업 대상에 포함되

어 있다. 그러나, 질병 치료에 꼭 필요한 주사제는 예외로 했으므로 주사제로 인한 불편은 없을 것이다.

6. 의약분업, 꼭 이루어져야 한다

모두의 건강을 위해 이제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이다.

우리 나라 만큼 약을 많이 쓰는

나라도, 약을 쉽게 사고 파는 나라도 없다고 한다. 21세기 선진국을 준비하는 나라로서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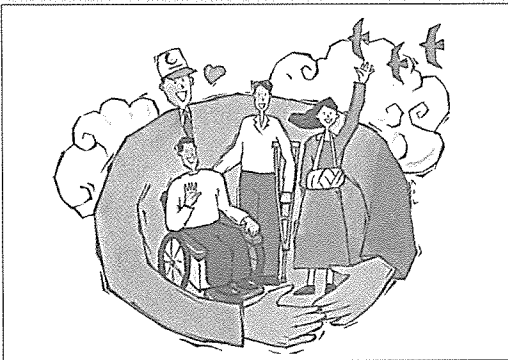
이제라도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우리 스스로 지키는 약속이 되어야 한다.

세계 선진국 어디를 봐도 의약분업이 없는 나라는 없다. 중국을 비롯한 인도, 필리핀 등 아시아 각국은 물론 미국, 독일, 영국 등 세계 선진국 어디서나 일찍이 의약분업은 선진 의료 제도로 정착되어 있다.

국민 건강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먼저 장애인 고용에 앞장선다.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



사업주가 의무 고용률(2%)를 넘어 장애인을 고용하였을 경우 지급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원 수준을 올렸다. 현재 장애인 1인당 월 최저

급 발휘할 수 있도록 직업 상담, 적성 검사, 직업 능력 평가 등의 서비스를 보다 강화하여 각자의 특성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중증 장애인이 직업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현장 훈련(OJT) 기회를 더욱 확대할 것이며 컴퓨터 관련 첨단 분야 중심의 직업 훈련을 무료로 실시기로 했다.

그리고 취업 후에도 안정적인 직업 생활이 가능하도록 고충 상담, 근로 보호 등 고용 안정에 최선을 다 하기로 했다.

이제부터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한국 장애인 고용 촉진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외에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소관의 특수 학교, 장애인 복지관 등에서도 양질의 직업 상담과 훈련, 취업 알선 서비스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중심으로 매년 200~250억 원을 투자하여 장애인의 취업 확대를 위한 지역별 서비스 지원망을 구축함으로써 편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72**

1. 한층 세로워진 법들

① 정부가 먼저 장애인 고용에 앞장선다.

정부가 먼저 장애인 고용을 선순범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애인 고용을 현재 권장 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변경했다.

또한 장애인 공무원 공개 채용 비율을 현행 2%에서 5%로 상향 적용, 장애인 공무원 1만 명을 목표로 하여 장애인의 공직 입문의 기회가 넓어지도록 했다.

② 장애인을 고용하면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임금의 60%(216천원)에서 최저 임금액(361천원)으로 높이고 중증 장애인이나 여성 장애인을 고용시에는 최저 임금의 최고 2배까지 우대 지급할 계획이다.

2. 장애인의 자립 적극지원

장애인이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통근 차량 구입 자금과 생활 안정 자금 지원 제도를 강화했다. 또한 장애인이 자신의 기술과 경험을 이용하여 자영업 영위를 희망할 경우 창업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고 창업 훈련 및 컨설팅 과정을 운영하여 적극 도와주기로 했다.

장애인이 자신의 잠재 능력을